

[ 종합 ]

시설

기업유치 지역주민이 발목 잡아서야

나주시 금천면에 호남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남양유업이 요즘 나주지역에 유행하는 갖가지 악성투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이제 겨우 터 닦기 공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뒷거래를 통한 신규직원채용설이 나도는가 하면 공장부지도 땅 투기를 위해 혁신도시가 들어섬 금천면으로 선정했다는 등 기업 이미지를 해치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전국의 각 지자체는 기업 유치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업 유치가 사활을 걸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 심지어 공장부지의 임대료와 공작 이전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기업유치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다. 이는 기업활동이 고용을 창출하고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등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부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의 기업 유치는 더욱 절실하다. 특히 각종 산업기반이 빈약한 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기업유치를 위해 타지역 보다 몇 배의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더욱이 광주·전남지역은 노사분규가 심하고 반 기업 정서가 깊다는 잘못된 이미지로 인해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익한 기업에 대해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기업유치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이 외면하고 떠나는 지역은 낙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역민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평가 갈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중요하다

15일 새벽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최근 양국 간 갈등을 감안할 때 당초 우려와는 달리 무난한 질풍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국 정상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에 합의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논란의 대상인 전직작전통제권(작통권)은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에서 이양 시기를 결정짓도록 해 이양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협상을 가속화해 성공적인 타결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하지만, 양국 간에 다퉈야 할 현안들이 워낙 민감한 것들이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은도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작통권 이양시기 역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향후 실무회담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견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번에 와는 달리 무난한 질풍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국 정상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에 합의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논란의 대상인 전직작전통제권(작통권)은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에서 이양 시기를 결정짓도록 해 이양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협상을 가속화해 성공적인 타결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하지만, 양국 간에 다퉈야 할 현안들이 워낙 민감한 것들이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은도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작통권 이양시기 역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향후

신안 최창원씨 적법성 논란 휩싸여 확정 유보  
화순 '60일전 현지 거주' 규정...인물난 가중

민주당이 10·25 보궐선거 신안군수와 화순군수 후보 선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신안의 경우 후보 자격 시비 때문이고, 화순의 경우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다.

◇신안 =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제5차 공직후보자자격을 심사위원에서 선정한 최창원 신안군수 재선거 후보(화순 부군수)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결정을 유보했다.

최 부군수의 자격을 문제삼아 일부 후보들이 이의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재심특위(위원장 배기운)를 열고 이의신청과 후보자 자격여부를 심사할 계획이지만 최종 후보 확정시기는 20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13일 갖기로 했던 최 부군수의 퇴임식도 연기돼 전남도 후속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화순 = 민주당은 구속된 전형준 화순군수가 18일자로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중랑감'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이 불가능하게 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8월25일(선거일 60일 이전)이전까지 화순군에 주소를 둔 사람만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소지가 화순군으로 돼 있는 후보들은 중랑감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앙당의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 군수의 사직서가 처리되는 18일 이후부터 후보를 정식 공모할 계획이다.

전원철 “임기 채우겠다”  
재·보선 불출마 입장 밝혀

전원철 감사원장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0·25 재·보선출마설과 관련, “헌법이 보장한 임기를 채우겠다”며 불출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고 있는 아시아지역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정보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어른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서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시 설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韓·美 정상, 대북 이견 감췄다”

“6자회담재개 공동노력 외 입장차는 서로 모른척”  
외신들 “盧는 美 비판 않고 부시는 강경입장 낮춰”

세계의 주요 외신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간 14일 정상회담과 관련, 대체로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감추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 정상이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를 한목소리로 촉구했지만 북한문제에 대한 이견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또 “두 지도자가 이번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1년째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에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공동 목표를 강조했지만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견을 공개하는 것은 피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특히 “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강경 접근법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입장을 되풀이하지 않고, 대신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비료와 쌀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AP 통신은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사실을 전하면

북핵 평화해결 원론적 공감...해법엔 시각차  
한-미 FTA 협력 재확인·‘비자 협상’ 탄력

◇전시 작전통제권 = 양 정상은 회담에서 환수시 미국의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공약을 재확인하고 환수연도 등 구체사항은 10월 한미 안보협의(SCM)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돼선 안 된다”라며 “작통권 이양은 주한미군 지속주둔과 미군의 한반도 안보공약 확고히 견지하면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상회담 결과가 전시 작통권 환수는 곧 주한미군 철수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환수반대를 외치고 있는 예비역 단체와 일부 지식·종교인들의 반대여론을 잠재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타 = 이 외에도 양 정상은 한·미 FTA 체결이 양국 모두의 경제 이익에 부합되고 전반적인 양국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성공적인 FTA 타결을 위한 계속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90일짜리 단기비자를 면제하는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한국이 조속히 가입하도록 노력하자는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VWP 가입에 파란불이 켜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부산대에서 '21세기와 민족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기 위해 강연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미 동맹 흔들림없이 지켜 나가야”

DJ, 부산대 특강

김대중 전 대통령은 15일 “한미동맹은 북한의 전횡도발과 주변 강대국의 야망을 억제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라며 “우리는 이것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부산대에서 ‘21세기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고 “한미동맹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7천억원 달해

6개 전업사 소멸포인트도 900억원

신용카드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고 카드사에 쌓아두고 있는 미사용 포인트 잔액이 7천억원 넘어섰다.

카드사들은 1포인트에 현금 1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7천억원 이상의 현금이 카드사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미사용 포인트 잔액은 7천27억4천400만원이다. 회사별로는 LG카드가 1천52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카드 1천457억원, 삼성카드 1천378억원으로 3개사가 1천억원대를 넘어섰다.

‘소장없는 헌재’  
4기 재판부 출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홍·목영준 신임 재판관 5명의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은 주선회 재판관 등 신임 재판관들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임 재판관들과 직원들의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로써 헌재 4기 재판부가 출범했지만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가 보류돼 소장 자리는 당분간 공백으로 남게 됐다.

목영준 재판관은 “소장님이 함께 취임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며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며 갈등보다는 화합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엔총장 2차 예비투표  
반기문 외교 또 1위

반기문 외교교통상 장관이 지난 번에 이어 1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사무총장 2차 예비투표에서 또 1위를 차지하자 외교부 관계자들은 반색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오전 비공식 브리핑에서 “예비투표의 성격상 의미를 부여하는데 조심스럽지만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는 보다 확실해졌다고 본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변수가 있는 만큼 최종 선출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2차 예비투표에서 찬성 14표와 반대 1표를 얻어 지난 7월 1차 투표 때보다 2위와의 격차를 4표 차(찬성)로 더 벌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이 격차에 주목하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1차 투표 때의 기권 2표가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분석하면서 반대표를 던진 이사국이 상임이사국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전문직 588명 소득신고 ‘0원’

의사·변호사 등 소득세 탈루 年 196억 달해

전문직 종사자도 588명에 달했다.

병영장 권모씨는 2005년 공단에 월 소득으로 5천27만원(연 6억864만원)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에는 0원으로 신고했다.

또 이모씨는 국세청에 월평균 소득을 ‘0원’으로 신고했지만, 건보료 탈루 적발 이후 정정 신고할 월 소득액은 2천265만원이었다.

세무사 이모(34)씨도 국세청과 건보공단 두 기관에 무소득자로 신고했으나 점검에서 건보료 탈루가 적발된 이후 594만원의 월 소득이 있다고 정정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이들 2천311명의 탈세 혐의자중 3명만 ‘소득축소, 탈루혐의자’로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탈세를 방치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빛日만평 - 김종두



꼭 먹어도 싸다